

지방의정
브리프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도입과
지방의회의 역할

이상범(대한민국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)



I. 도입 배경

-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한 기부문화의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됨
 - 특히, 수도권으로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그리고 지역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돌파구로써 모색됨
-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재정 분권 과제의 일환으로 (가칭)「고향사랑 기부제법」 시행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됨
- 이후 2021년 10월 제21대 국회에서 『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(고향사랑기부금법)』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

II.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조

-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기부자(국민), 지방자치단체(광역시, 기초), 해당 지역주민, 지방의회, 답례품 생산자, 중앙정부 등이 그 작동에 있어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
 - 기부자는 본인의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며, 법인은 기부가 불가함
 -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집·홍보·운영 및 사업추진을 함. 단, 기부강요 및 모금방법 위반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음
 - 지방의회는 기부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,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누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함
 - 해당 지역주민은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호응해야 함
 - 답례품 생산자는 답례품 개발과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. 특히 품질유지는 기부유인의 중요한 요소가 됨
 - 중앙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관리 및 제도적 조정과 지역경제 활력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야 함
-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정치자금기부금제와 지역사랑상품권제(답례품)가 합쳐진 독특한 제도임
 -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금 10만 원은 소득세 신고 시 10만 원을 공제받는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역시 10만 원을 돌려받음
 - 추가로 지방정부가 3만 원 이하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기부자는 최대 13만 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음
 - 즉, 답례품은 기부액의 30%까지 제공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,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.5%를 공제함(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)
- 개인 기부금의 연간한도액은 5백만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모금한도액은 규정하지 않음

III.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활성화 사례

-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므로 일본의 활성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
- 첫째, 재난재해에 대한 기부금의 증가임. 일본 고향세의 기부금 증가를 보면, 2011년의 동일본 재해에 따라 기부금액이 대폭 증가함
 - 지방자치단체(도도부현, 시구정촌)에 대하여 기부한 금액은 2008년 8,139백 만엔, 2010년 10,217백 만엔 이었으나, 2011년 동일본 재해 때 12,162백 만엔으로 크게 증가
- 둘째,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임. 2015년 고향납세 공제액의 2배 확대 및 원스톱 특례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따라 크게 증가
 - 2014년 기부금액은 38,852백 만엔에서 165,291백 만엔으로 대폭 증가
 - 2020년 기준 기부 건수는 3,488만 건, 납세금액은 672,490백 만엔 임

〈표 1〉일본 고향납세 제도 경과

연 도	주요내용
2008	고향세 납세제도 도입
2009	홋카이도(北海道)에서 최초 실시
2011	동일본 재해에 따른 기부금 증가
	납세자 자비부담금을 5,000엔에서 2,000엔으로 인하
2015	고향세 특례공제 상한액을 주민세 소득할액의 10%에서 20%로 인상
	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: 장기급여자의 확정신고서 제출 생략
2016	지방창생응원세제 도입(기업판 고향납세)
2019	고향납세 지정제도 신설 : 고향납세 지정기준 및 지방세법 상 지정기준 신설

※ 출처: 신승근·조경희(2022),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, 농민신문사 참고작성.

- 셋째, 답례품 제공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임. 고향납세의 증가 요인에 대한 2017년 일본 총무성(2018)의 지자체 (총 1,788개)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
 - ‘답례품의 충실’ 1,021단체(57.1%), ‘고향납세의 보급·정착’ 1,020단체(57.0%), ‘세수납부환경의 정비(신용카드 납부, 전자신청)’ 747단체(41.8%) 등의 응답을 보임
 - 이중 ‘답례품 충실’의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는 일본 고향납세의 증가요인으로 기부금에 대한 반대급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

〈표 2〉일본 고향 납세의 증가요인

(단위: 단체수, %)

고향세 증가 이유	2016년	2017년
답례품의 충실	1,017지자체(56.9%)	1,021지자체(57.1%)
고향세의 보급, 정착	999지자체(55.9%)	1,020지자체(57.0%)
세수납부환경의 정비 (신용카드납부, 전자신청)	766지자체(42.8%)	747지자체(41.8%)
홈페이지 등 홍보의 충실	588지자체(32.9%)	580지자체(32.4%)
납세자 친화적인 세수행정 (원스톱 특례 제도 등)	791지자체(44.2%)	538지자체(30.1%)
사용처, 사업내용의 충실	122지자체(6.8%)	169지자체(9.5%)
지진재해 지원	42지자체(2.3%)	90지자체(5%)

※ 출처: 日本 総務省, “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”, 각 연도.

IV.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

-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
- 첫째,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조례 제정목표의 설정임
 -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은 저출생·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조례제정 목표를 설정
 - 이러한 목표설정은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과 관련하여 지역 내 다양한 향토산업 또는 전통산업을 활성화시켜 내고장의 홍보 및 관광 등에 활용할 수 있음
- 둘째, 조례를 통한 투명한 사업운영 및 지역 현안사업 발굴·지원임
 -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기부금에 대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(법 제11조)
 - 조례에는 기부금 운영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함. 즉, 지원사업 공개, 기부자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 일정 경과보고, 사업성과보고 등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임
 - 또한 활력있는 지역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 발굴에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. 예를 들면, 지역 내 1차산업이나 지역특산물의 생산·제조 물품의 유통·판로·마케팅사업, 지역 내 환경보전, 관광, 문화, 스포츠, 교류·연계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
- 셋째, 기금 재원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에 대한 고려임
 - 고향사랑기부금은 결과적으로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개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
 - 지방정부의 사업실현을 위해 기부자의 기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원칙에도 바람직하지 않음
 -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 모집된 기부금에 지방재정 매칭을 하게 되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재원확보에도 기여할 것임
 -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정의 지원도 필요하며, 이에 대한 지방의원의 철학과 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

내용문의 : 이상범(대한민국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, lsb8972@hanmail.net)